

## 11.21 총파업, 뜻은 올랐다

### 전국 단사 대표자 총파업 결의 확인 ... 전국 15개 지역 총파업대회 개최,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총력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모여 11.21 총파업 결의를 확인했다. 사업장 대표자들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와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1.21 총파업 조직태세 점검을 마치고 마지막 조직회에 온 힘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의료업을 노동 특례제로 묶어두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는 물론 환자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마지막 순서로 대회사를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 법과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을 받아냈다.

김명환 위원장은 “11.21 총파업은 전태일 열사가 온 몸을 던져 세상을 바꾼 길을 이어 가는 투쟁이다. 삶이 어려운 모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파업이 될 것이다. 지도부가 앞장서 반드시 승리로 총파업을 완성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것발로 ‘반값 임금 광주형 일자리, 비정규직, 탄력근로제, 노동 적폐’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가르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파업기를 부르며 총파업 최대 조직을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2018 총파업 투쟁 승리,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단위사업장 대표들은 위력 있는 총파업 성사로 문제인 정부 반노동-친재벌 정책 회귀를 막아내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반값 임금 공장을 만들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나쁜 일자리 사업이다”라고 비판했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은 노동시간 단축뿐이다. 문제인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조와 대화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투쟁사에서 “총파업 투쟁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노동법 개정과 ILO 단결권 핵심협약 비준, 사회 대개혁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다. 금속노조는 망설임 없이 민주노총 지침대로 총파업에 복무한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서울동부병원지부, 서울대병원지부 대표들이 나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병원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근절을 촉구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보건

## 현대차, 집회 자유 무시는 기본, 대법원판결 무시는 옵션

### 노조·유성범대위, 집회 방해 현대차 고소·고발... “현대차 자본 하수인 전락 서초경찰서 응징”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1월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의 자유, 노조 할 자유 가로막은 현대차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집회 갑질 알박기가 대법원판결로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본사 앞 집회를 가로막는 현대차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8일 재벌의 집회 알

박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집회 알박기’는 집회를 실제로 할 계획이 없으면서, 다른 이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벌이는 폭력이다. 대법원은 이런 행동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법률가들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과 서

초경찰서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대법원판결이 알박기 집회가 불법이라고 확인했지만, 현대차의 용역경비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경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며 “현대차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서초경찰서를 고소, 고발해 응징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30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대화 나와라’

‘비정규직 그만쓰게’ 4박 5일 공동행동 마무리 ... ‘11,000명 비정규직 그만쓰게 선언운동’ 계속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그만 쓰게’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이 4박 5일간의 비정규직 공동 투쟁을 마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월 30일까지 대화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공동투쟁단은 “3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여 2차, 3차 공동 투쟁을 전개하겠다” 라고 경고했다.



공동투쟁단은 11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그만 쓰게 4박 5일 공동행동>을 마무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공동투쟁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함께 살자는 포용 국가를 만들려면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단은 11월 30일까지 대화 요구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해결을 바라는 11,000명 비정규직 그만 쓰게 선언 운동’을 계속 벌이겠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소박하면서도 절실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래 있던 정규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라며 파견법 철폐를 촉구했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공동 투쟁으로 비정규직 투쟁의 등대를 세웠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등대를 보고 하나로 모여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독려했다.

김수익 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화성지회장은 “업종과 사업장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공동 투쟁을 벌였다”라며 공동 투쟁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수익 지회장은 “노조에 가입 못 한 98%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 동참해 달라. 우리에게 연락하라”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선언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12일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법원, 대검찰청, 국회 등을 돌며 공동 투쟁을 벌였다. 비정규직 투쟁단이 13일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검찰총장 면담과 불법 파견,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대검까지... 무서운 게 없는 민노총”이라는 기사를 실어 사회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를 왜곡했다.

공동투쟁단은 ‘1,100만 비정규직 문제

## “멀고 힘들어 보이지만 끝까지 함께 간다”

서울지부 투쟁사업장 공동 투쟁 ... 신영프레이션 · 성진씨에스 · 레이테크 · 포르쉐 노동자, 막장 자본 맞선다

노조 서울지부가 11월 16일 ‘정리하고 철회, 기획폐업 분쇄, 갑질 사장 구속, 포르쉐 기본급 인상 서울지부 투쟁사업장 공동 투쟁’을 전개했다. 오전 한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시작해 엘지그룹 본사를 거쳐 마곡동 코오롱을 찍고 서울 고용노동청까지 돌며 투쟁을 벌였다.

서울 여의도 엘지그룹 본사 앞 집회에서 이희태 신영프레이션본부회장은 원청 엘지의 책임을 물으며 웃지 못할 사례를 알렸다. “엘지의 높은 사람이 공장에 와서 ‘어, 신영 로고가 파란

색이네 삼성 같다’라고 하자 시늬가 빨간색으로 비뻤다”라고 전했다. 엘지에서 현장 점검 나오면 냄새를 맡기도 힘든 세척제로 공장을 도배하다시피 했다고 폭로했다.

이희태 본회장은 “원직복직이 멀어 보이고 엘지에 맞선 투쟁이 힘들어 보이지만 기러기처럼 연대하고 단결할 때 재벌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창규 포르쉐지회장은 한성자동차 본사 앞 집회에서 “우리 포르쉐지회로 인해 레이싱 흥

그룹에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 지회 투쟁으로 그룹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해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규 지회장은 포르쉐가 주말 근무수당을 받게 되자 벤츠도 받게 됐고 포르쉐가 주말 행사를 거부하자 한성자동차에서 청계산 뛰고 주말에 10시까지 퇴근 시키지 않는 약속이 없었고 있다고 덧붙였다.

# “노동시장 망치고, 자동차 산업 공멸”

광주형 일자리 문제점 진단 국회 토론회 ... 노동 3권 뺀 반헌법 정책, 저임금 일자리 난무 경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국회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 현대차지부는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2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김종훈 의원실과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벌였다. 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원이 발제하고, 허부영 현대차지부장,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정태홍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현장과 지역에서 진단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발전과 일자리 만들거라는 핑계로 노동자의 노동 3권 행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광주형 일자리 계획으로 만든 완성차 공장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공급과잉을 가져와, 모든 자동차 산업 업체를 공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할 노동자 권리 빼앗는 계획

김경근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 계획에 대해 “일자리 문제를 기업 차지에서 풀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경근 연구원은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진영은 지금까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짜 시장과 고용 관계와 노동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진짜 사장이 기업 대신 지역이라는 모호한 주체가 노사관계에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김경근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장기 산업전망 없이 ‘반값 인건비’라는 유인 동기로 기업유치를 추진하면서 지역별 도시별 임금경쟁을 촉발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미래 자동차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동차 산업 전체의 수요공급 상황을 살피지 못한 과잉투자 투자로 한국 자동차 산업을 공멸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허부영 노조 현대차지부장은 “낮은 방식의 공장 증설로 미래 자동차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 지금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시기다”라며 “조선산업이 호황기에 공장을 증설하다 결국 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낮은 임금을 지역 차원의 복지와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계획에 따르면 기존 광주의 노동자와 새 산단 노동자를 차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산단에서 저임금으로 일한 노동자가 많다. 광주 지역 전체 노

동자의 복지를 향상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전반 다시 짜야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경제 상황과 고용위기를 풀어낼 생각보다, 노동조합에 비판을 떠넘길 생각만 하고 있다.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벤처창업지원과 규제 완화 등 지난 정부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박용석 연구원장은 “산업변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독일 정부는 산업 4.0과 노동 4.0이라는 전망을 함께 세웠다. 한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고 선언하면서, 정작 산업정책 수립할 때 노동자 참여를 배제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용석 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지역의 당사자인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논의에서 배제하는 희한한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자신의 가치와 계획을 세우고 민주노총에 따라 오라는 식의 포섭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해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다시 대화하자”라고 촉구했다.

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을 놓고 누구와 언제든 지 대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허부영 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일대일 공개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이토록 문제가 많은 사업을 줄속으로 강행한다면 현대차지부는 과업 등 모든 수단으로 이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